

행정조사 종류

- 복지부 실사
- 공단 조사
- 심평원 조사
- 보건소 조사
- 소방서, 세무서, 식약청 등 등

현지조사 업무 수행

업무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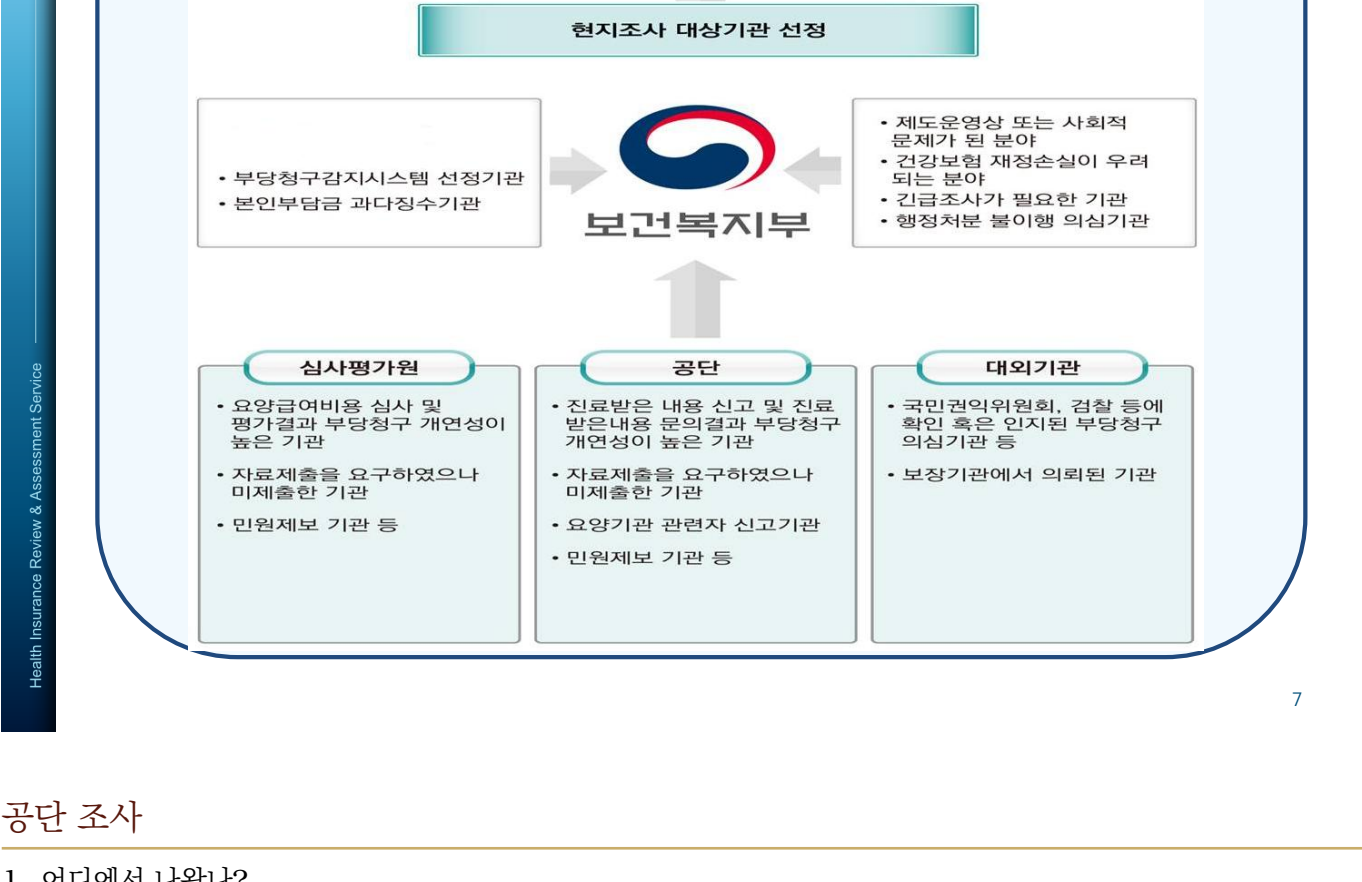
- 보건 복지부
 - 현지조사 법적 권한, 심평원 및 건보공단 지원 받아 현지조사 관장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
 - 대상기관선정, 조사 실시, 정산 심사, 행정 처분, 사후 관리 등
 - 현지조사 업무 전반 지원
- 국민건강보험공단
 - 수진자 조회 등 현지조사 업무 지원

조사반 구성

- 의원급(약국) : 3명 x 3일
- 병원급 : 4명 x 5일
- 종합병원급 이상 : 5명 이상 x 6일 14일

심사 및 현지확인과 비교

구분	주관	법적 근거	조치 사항
현지조사	보건복지부	법 제97조 제2항	부당금액환수 행정처분 형사고발
방문심사	심사평가원	법 제47조 제2항 시행규칙 제20조	심사조정 현지조사 의뢰
현지확인	건보 공단	법 제14조, 제57조	부당금액[환수] 현지조사 의뢰



7

공단 조사

1. 어디에서 나왔나?
대답: “공단에서 나왔습니다”
대응: 공문 봅시다 (자세히 읽어본다)

2. 조사성격? 증거수집 목적이 강하다

3. 상대방 무기 - **공단조사 불응시 복지부에 실사 요청 권한만 있다**

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 → 조사협조요청이다

문제제기

- 1) 요양급여에 관한 조사 권한이 어디 있나?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은 공동조사 해야(행정조사기본법 4조3항, 14조)
- 2) 왜 사전 통보 안 했나? (행정조사기본법 17조 - 7일전 통지의무)
- 3) 조사를 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면 안 된다 (행정조사기본법 15조 중복조사제한)
건보공단 조사 후 심평원 실사 의뢰 동일 사안 재조사
- 4) 조사내용과 범위를 왜 고지하지 않나?

조사 불응시 공단의 무기? → 없다

- 1) 현지조사 의뢰 가능(조사 옹하면 현지조사 없나? 전혀 그렇지 않음)
- 2) 타협해서 좋은 결과 거의 보지 못함

공단조사시 타협으로 좋은 결과 얻기 힘든 이유

- 1) 그들의 방문 목적 : 공단 실적 자기 실적
- 2) 타협 당시 전혀 행정처분 내용을 알 수 없음
- 3) 조사 이후의 진행 절차는 그들의 권한이 아니므로 조사원이 그 이후를 보장할 수 없다
- 4) 즉 타협은 그들의 회유 술책이다!

공단이 조사 목적과 범위를 밝히지 않는 조사 : Ex) 차트 일체, 수납대장

일체 미련 갖지 말고 차라리 실사로 가라!

사유 차분히 대비할 수 있다 (공부하고 시험치는 것이 낫다)

현지조사 절차

서면조사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 방문하지 않고 요양급여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

요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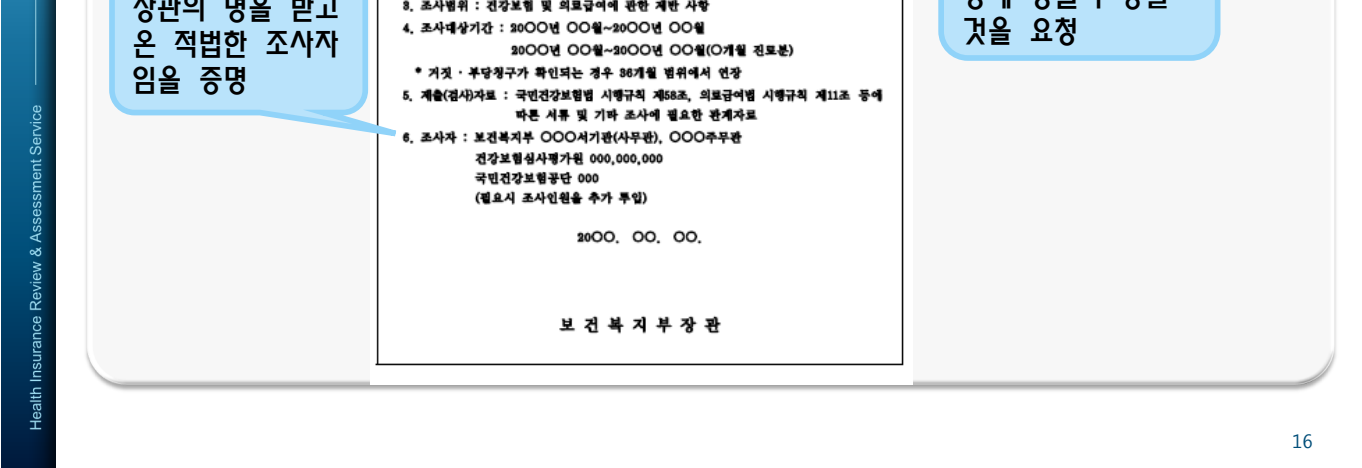
현장조사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 방문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

사전통지 실시 '선정심의 위원회'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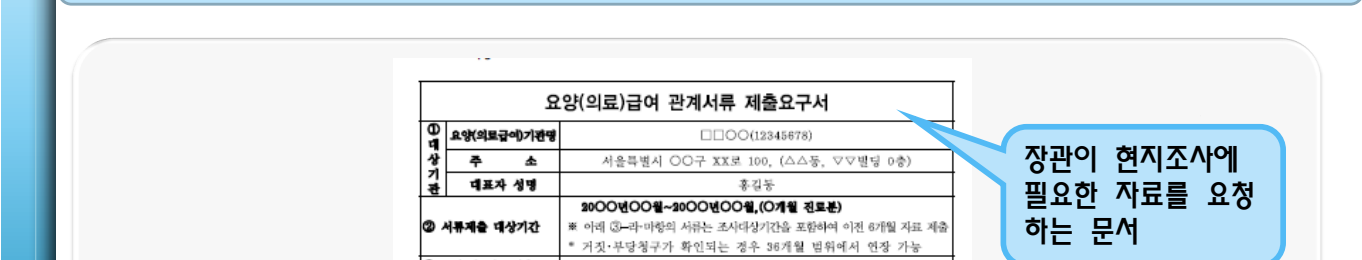
사전통지 > 도착 > 신분증 제시 > 조사명령서 전달 > 조사내용 통보

사전통지 미실시 '선정심의 위원회'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심의한 요양기관

도착 > 신분증 제시 > 조사명령서 전달 > 조사내용 통보



16



1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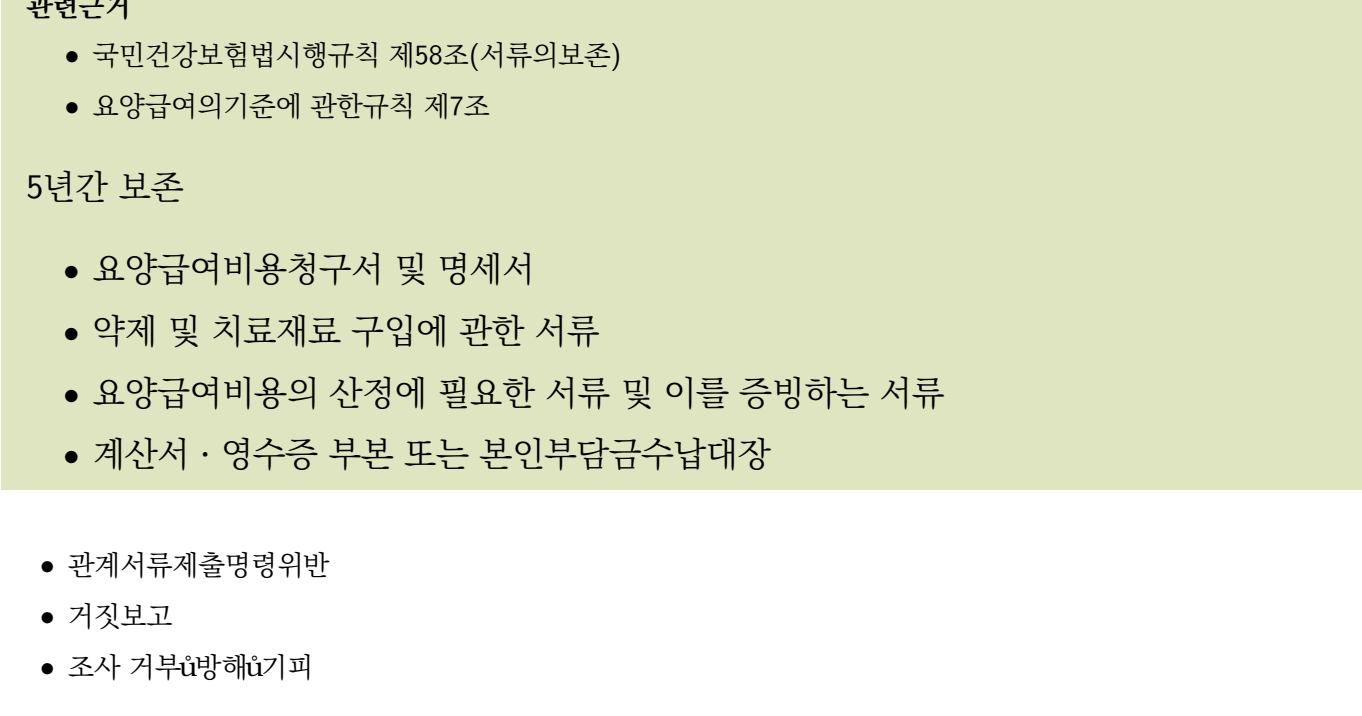
복지부실사

1. 어디서 나왔나? 심평원 → 공문 봅시다
2. 조사성격 : 계도가 아니라 처벌을 목적
3. 거부시 - 국민건강보험법 98조2항 영엄정지 1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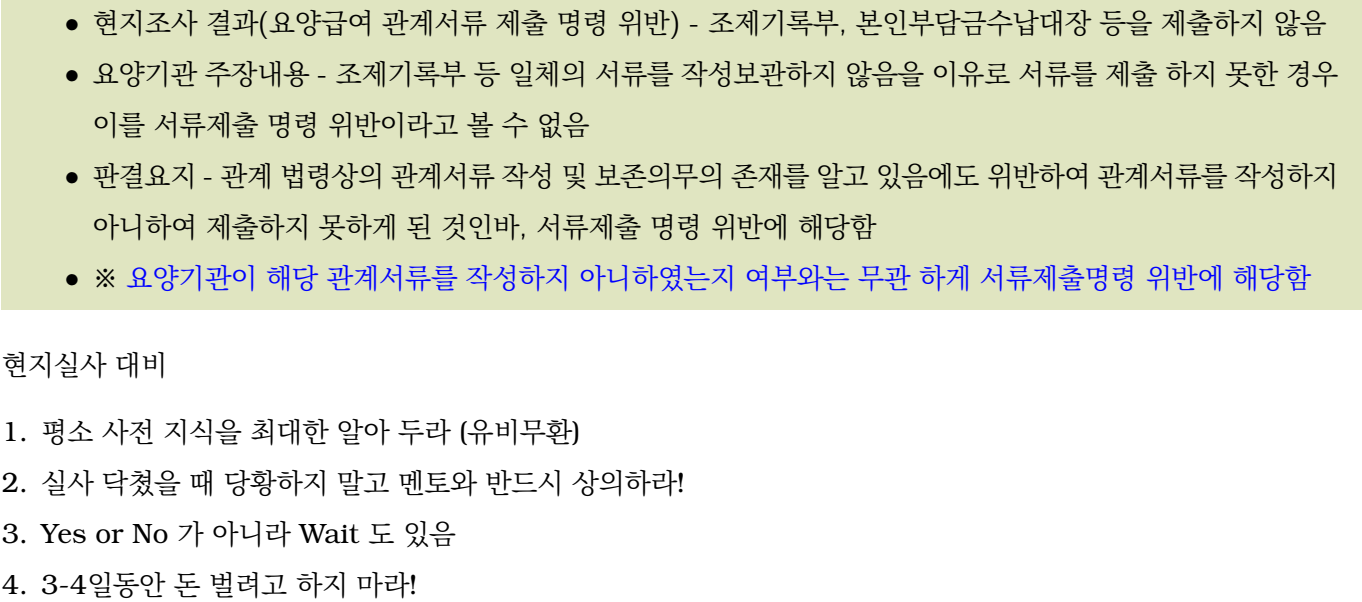
심평원 실사 대응

1. 전체 과정 이해 : 현지조사 이후 3년정도의 쟁송기간
 - 3-4일 조사 후 돌아감 →
 - 3-6개월 후 사전처분서 →
 - 이의신청 →
 - 3-6개월 후 행정처분(면허정지, 과징금, 업무정지) →
 - 행정소송 1심 →
 - 행정소송2심 →
 - 대법원
2. 3-4일 조사시(심리상태: 두려움, 회피), 사전처분서 받았을 때 (심리상태: 분노, 대책찾음), 행정처분시 (절망)
3. 회원들 문제점 - 3단계, 4단계에서 대책을 세우고 연락한다. **여후: 굉장히 나쁘다**
4. 핵심: 1단계인 3-4일 조사에서 대책을 세우고 잘 대응해야 한다.

관계서류 조사



-> **업무정지1년, 1천 만원 이하 벌금**



현지실사 대비

1. 평소 사전 지식을 최대한 알아 두라 (유비무환)
2. 실사 닦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멘토와 반드시 상의하라!
3. Yes or No 가 아니라 Wait 도 있음
4. 3-4일동안 돈 벌려고 하지 마라!
5. **사실확인서 (원장&직원) 조식** : 쓰지 않는 것이 좋다(확인자의 권리) → 본대로 처분해라 작성의미는 해당 부분에 대해 향후 이의신청, 행정소송 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

사실확인서 (매우 중요)

- 3-4일 조사의 핵심으로 조사관이 돌아가기 전에 요구 : 위의 전체 과정 중 2단계 이후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미
- **헌법12조2항**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음 권리, 현재 판례 : 형사처벌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행정조사도 포함
- 대응책: **보신대로 처분해라, 사실여부를 떠나 안 하고 싶다.**

현지조사시 사실확인서 타협으로 좋은 결과 얻기 힘든 이유

- 1) 그들의 방문 목적 : 처벌(실적) 목적 (o), 계도 목적(X)
- 2) 타협 당시 전혀 행정처분 내용을 알 수 없음
- 3) 조사 이후의 진행 절차는 그들의 권한이 아니므로 조사원이 그 이후를 보장할 수 없다
- 4) 사실상 이의절차를 포기하겠다는 의미
- 5) 즉 타협은 그들의 실적 확보를 위한 회유 술책이다!

현지실사의 대응팁

- 1) 중요한 것은 원장이 직접 해야 : 의료기관 내부 고발이 많음
- 2) 평소에 최대한 규정에 맞게 : 나중에 6배 환수
- 3) 입증 책임은 복지부에게 있음 : EX) BMD를 간호사가 했다? → 모든 사례에 대해 건진이 복지부가 누가 했는지 입증할 해야 함 -> 생각없이 포괄 확인서 쓰면 안 됨
- 4) 실사 왔을 때는 진료를 최소화하고 실사에 집중해야!